

민주 486결속... 당권구도 변할까

이인영 중심 독자세력화... 빅3와 경쟁 가능성
‘하청정치’서 벗어나 홀로서기 할지는 미지수

민주당 486그룹이 이인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후보단일화를 시도하면서 독자세력화 여부와 당권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486 그룹의 후보단일화 강행을 독자세력화를 위한 첫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명백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후보단일화를 강행한 것을 단순하게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 전 대표와 연대를 통해 최고위원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빅3와 경쟁을 통해 당의 새로운 얼굴로 거듭나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이 전 의원이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당권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486 세력이 하나로 뭉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부터 비노(非盧) 성향의 김근태계로,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과는 다르다. 또 이 전 의원 진영은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박지원 의원과 김현미 전 의원이 가세하는 등 ‘연합군’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다. 정세균 체제의 입이었던 우상호 전 의원은 486의 대변인이나 좌장으로 나선 상태다. 더욱이 컷오프에서도 최재성 의원은 정세균·백원우 의원과 트리오를 이뤘지만 이 전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486 핵심그룹은 정전 대표 지지 성향이 강해 1인2표제로 실시되는 전대에서 정전 대표와 연대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의원으로의 단일화를 정전 대표가 용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86이 뭉쳐더라도 반드시 정전 대표와 연대하지 않고 연대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86의 독자세력화 선언을 정세균계



돌하루방 선물받은 후보자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동영, 정세균, 박주선, 천정배, 이인영, 조 배숙, 손학규(오른쪽부터) 후보가 14일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 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돌하루방을 선물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靑서 비공개 청문회 제의”

도덕성 비공개·자질 공개... 靑 “그런 사실 없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여권 핵심 인사로부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제(여권에서)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까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검증한 인사청문회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고 밝혔다.

박 대표는 “나는 ‘도덕성 검증을 왜 비공개로 하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올테니 민주당이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정의당) 사건 인사청문회 결과를 국회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나중에 언론에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가 말한 여권 핵심 인사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냥고 있다.

당장,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인사청문회 제의) 주장을 관련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며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박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원식 감사원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총리 인선을 위한 인사검증서 작성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장과 맹 장관은 이날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검증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신학을 의원의 질문에 모두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 원점에서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까띠끌레 피부개선 기능성화장품 지역대리점 및 사원모집

- 소자본투자
- 안정된 수익률
- 미용관련종사자 우대

열정 가득한 분을 모십니다!!

지역대리점은 (목포, 여수, 순천, 익산, 전주, 남원 등입니다.)

까띠끌레는!

-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 국내 최초 더미프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 * 2010년 프레타포르테부산 공식 지정 화장품으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두바이 등 다수)
-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문하여 까띠끌레 까지점 모집 : 자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자 가능



Caticlair 까띠끌레 호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201호
062)362-1117 / 010-3608-6394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 현실적”

민주 대표적 개헌주자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일보는 14일 민주당의 대표적인 개헌주의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을 만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개헌 시기는.

▲일단 2012년까지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개헌을 추진한다면 2017년에도 가능하다.

-개헌의 주체는.

▲우선, 여야 정치권이 물밀접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후 개헌 특위를 발족시켜야 한다. 또한, 기본권 개정은 환경 문제 등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개헌이다.

-개헌 개정의 당위성은.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상 입법부는 그동안 대권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전락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87년 이후,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법이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가지로도 개헌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개헌과 호남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헌과 호남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성은.

▲개헌의 내용과 방향성이 정해져야 하므로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전환된다면 호남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90% 정도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밸류팅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리당략적 의도만 배제된다면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소수 야당으로서 개헌과 관련, 여권의 정치적 의도를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며,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헌은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

-개헌과 호남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성은.

▲개헌의 내용과 방향성이 정해져야 하므로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전환된다면 호남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정사회, 부메랑 될 수도”

정두언 의원 비판 눈길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14일 여권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사회’ 화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사회, 어떻게 실천해야 하니’ 보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시 기치로 내건 실용주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공정사회 화두가 야당을 공격할 수 있고 여당을 통제할 수 있어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어 레임덕 방지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양날의 칼이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공

정한 사회는 공정한 기회·절차·관계·결과 4가지로 이야기한다”며 “공정한 기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부의 대물림으로 간다는 비판이 있고, 공정한 절차는 법치와 신상필벌인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 권리

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공정한 관계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왜 아무 말을 안하는지 의아스럽다”며 “공정한 결과는 세금이 중요한데, 세제 혜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재벌에 대해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하고 있는지, 감세가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조현오 ‘차명 발언’ 등 공방

국회 예결위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몽실 발크림 출시!!
약국판매용

튼살!! 굳은살!! 각질제거!!

무릎, 팔꿈치, 복승아빠,

발뒤꿈치 케어크림!

거칠고 자주 트는 발을 매끈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검증한 인사청문회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고 밝혔다.

박 대표는 “나는 ‘도덕성 검증을 왜 비공개로 하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올테니 민주당이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정의당) 사건 인사청문회 결과를 국회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나중에 언론에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가 말한 여권 핵심 인사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냥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 원점에서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